

호남행 열차 탄 민주 당권 주자들, 텃밭 민심 다지기 총력

송영길, 나주·화순 찾아 표심 호소…정청래 “1인 1표 힘으로 승리”

김민석, 대규모 결의대회서 ‘호남 성공’ 강조…승부처 공략 사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호남을 찾아 당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권리당원의 30%가 몰린 텃밭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수도권 당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는 이날 화순과 나주를 찾아 ‘시민 공감 토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집권당 지도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현안이나 서민 아픔을 이해하고 있구나’, ‘진단하고 있구나’ 등의 모습은 안 보이고 매일 보완수사권 이야기한다”며 “1인 1표, 친경·반문 이런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위해 1번을 송영길 찍고, 2번은 김민석을 찍어달라”며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같은 날 정청래 후보도 호남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은 정 후보는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당대표가 됐을 때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신규 사업을 했지만, 광주는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보상을 다 못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를 선물로 주셨는데, 임기 안에 완성이 돼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법도 만들고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김민석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있지도 않은 명정대전 프레임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라며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말바우시장을 찾은 정 후보는 이후 장애인단체와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도 호남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생고를 시장과 익산 영등동 먹자골목 등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다. 또 김제·부안에서의 강연회와 백문백담 행사를 통해 당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전남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팔승 결의대회 ‘메가호남-메가집회’를 갖고 연설 상당 부분을 호남의 역할론에 할애하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는 “호남을 반도체의 새로운 메카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4일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기호순).



사진제공=SNS 갈무리·연합뉴스

는 메가프로젝트는 호남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승부수”라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 성공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이끄는 기관차가 돼야 한다”며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돼 호남에 대한 그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으로 향하면서 표심 쟁탈전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5일 호남 순회경선 예정된 데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온라인투표가 11~14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리당원의 30%가 몰린 호남의 민심이 권리당원 40%가 분포한 서울·경기의 온라인 투표(12~15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호남에서의 결과

가 사실상 승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후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보들의 호남 성적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가 표밭을 다지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후보들의 호남 민심 살피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지원 광주까지 확대

장흥호국원 개원전까지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 지원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 제공·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

로 지원 대상을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넓혀 지역 간 차별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호국원에 안장을 희망한 국가유공자가 개원 전에 사망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는 장흥호국원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2025년부터 해남 남도

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자격으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로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때까지 임시안치할 수 있다.

장흥호국원 개원 후에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회복지과(061-286-5790)나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061-530-5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노조에 조직개편 초안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광주·무안청사 공무원 노조에 조직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조직개편 노사공동협의체 2차 회의에는 통합특별시 인사·조직팀장 등 4명과 전남공무원노조, 전남열린노조, 광주노조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청사별 기능 분배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안 초안을 노조에 공개했다. 조직개편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인사·조직·총무 등 기관 유지 기능을 청사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획 업무는 광주청사, 예산 업무는 무안청사, 인사 업무는 광주와 무안청사에 각각 두는 방

안이 제시됐다.

통합특별법에 규정된 종전 근무지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의 원칙을 준수하되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이동에 대한 보상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직개편안 초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사 공동협의체는 오는 7일 광주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왕진 “발전공기업 통합법인 본사 ‘나주’로 와야”

국내 최대 해상풍력·태양광 집적지…한전·전력거래소·한전공대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 “통합법인의 본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전선인 호남, 그중에서도 나주에 자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통합법인의 본사 입지는 통합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통합의 목적이 단순한 조직 일원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포트폴리오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면, 사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이미 신안 해상풍력을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집중돼 있고, 전국 태양광 발전 입지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라며 “통합발전사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남 나주가 통합 본사의 적지”라고 말했다.

또 “나주에는 이미 한전 본사와 전력거래소, 한전공대가 자리잡고 있어 에너지 정책·연구 기능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며 “통합법인이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존 인프라, 호남의 재생에너

지 현장과 함께 협업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조직 안정화와 정책 실행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이 이뿐만 아닌 통폐합에 그치지 않으려면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변동비(연료비)를 전력시장이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CBP)와 판매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통합과 함께 이러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병행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탈석탄 자산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지,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어떻게 지킬지도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실제로 에너지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 기초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소통 문화 정착…변화 만드는 의회 구현”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현장중심 의정활동 통한 ‘주민 체감 정책’ 확대

전문성 향상…집행부 견제·감시에 역량 집중

“남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남구 발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은봉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남구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10대 남구의회 의장직을 맡은 그는

소통 중심의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변화’를 만드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선 행정통합을 맞아 남구 발전을 위해 변화를 만드는 의회로의 탈바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

충,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과 직결된 구정 현안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구상이다.

은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행정과 경제,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이 일상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등 행정통합 시대에 걸맞은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해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또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를 조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

하고,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

은 의장은 “원활한 소통으로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화합과 협치를 이루고 남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한 조례 입법과 예산 반영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물론 현안에 따라 협력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언제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민생 현안을 직접 찾아 구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의 전문성 향상에도 집중한다. 예산 심사와 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은봉희 의장은 “의원 모두가 구민의 대표로서 소명을 다하고, 남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더 살기 좋은 남구, 더 큰 희망이 있는 남구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구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